

■ 유엔 대북 제재 정부 이행방안 이번주 윤곽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안보리 결의 저촉 안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조정문제,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30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이행 조치 사항을 통보토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음달 13일 이전까지 우리 정부의 조치 사항들을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조율된 조치’ 마련이 지체 됨으로써 야기될 혼란을 피하자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대강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美 참여 암박 PSI는 방법론 놓고 고민중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은 담당하는 법정부 테스크포스(TF)를 결성하는 등 밸브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통일부 등의 당국자들로 구성된 법정부 TF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및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으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과 관련, 정부는 두 사업이 안보리 결의 내용과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사업 자체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

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교사, 학생 등에게 제공되는 관광 보조금과 도로 등 신규 시설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을 동결하고 개성공단의 경우 임금 지불제의 조기 도입을 통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입장은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강도높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PSI 참여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을 놓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PSI 참여문제는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 시한과는 무관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 안팎에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SI 참

여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거듭된 통찰 요구를 마냥 뿌리치기도 힘든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PSI 참여확대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서는 PSI 반대론자들의 완강한 입장이 ‘세’를 형성한 상황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갖고 참여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PSI에 참여하는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북한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집값이 기가 막혀



장필수

경제부 차장

전국이 아파트 거품은 징으로 뜨겁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이지만 물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8·

31’과 ‘3·30’ 등 두차례 세

금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신도시 2곳을

주가로 조성하겠다며 공급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

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민들의 동요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조성정책이 자고나면 몇천만원씩 뛰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렇다고 지금 집을 사자니 꼭짓점에서 물리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때문이다.

핼리의 ‘사느냐 죽느냐’의 고민이 이땅에선 ‘지금, 집을 사느냐 마느냐’로 바뀐 형국이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비단 수도권 주민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데 있다. 광주시민들도 갈수록 높아가는 분

양가 때문에 새집 들어가기를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그렇다면 집값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거풀이 끼어 있을까. 주택시장의 거품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PIR(Price Income Ratio)이라는게 있다.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라별 PIR을 보면 영국이 4.6배, 미국이 2.7배, 우리나라 5.5배 수준이다. 특정지역으로 더 높히면 서울은 7.7배, 서울 강남은 13.5배다. 즉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않고 13년 6개월간 저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는 어떨까. 요즘 분양되는 광주지역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600만원선이고 광주시민들의 연평균 소득은 3천만원정도다. 가장 수요가 많은 32평 아파트를 보면 분양가에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하면 2억1천만원정도가 든다. PIR이 7배다.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의 분양가는 800만원에 육박한다. 모 건설사의 45평형 아파트의 PIR은 서울 강남수준인 12.6배다. 12년 6개월치의 월급을 한푼도 쓰지않고 봉선동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주식시장에도 PIR과 같은 PER(Price Earnings Ratio·주가수익비율)가 있다. 주가가 그 회사 1주당 수익의 몇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자들은 PER가 낮은 회사가 저평가 돼있다며 투자에 나선다.

주택시장에도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도록 ‘저 PIR주(住)’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

/bungy@kwangju.co.kr

“6자회담 나가면 금융 풀어줄지 궁금해하더라”

北 다녀온 박재규 前 통일부 장관



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핵문제를 놓고 미국이나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름으로 더 강한 제재를 가해 목을 끊으나 더 강하게 대응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도 ‘미국과 대화로 풀어버리다’는 북측 인사들의 전언이 있었고 밝혔다.

이번에 박 총장이 만나 인사를 중이 부위원장의 경우는 지난 8월 립동역 통일전선부장 사망 이후 사실상 대남정책관 최고 실무책임자라는 점에서 북측 인사들의 전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총장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체제에 대해서는 “북한 경제가 그동안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어 곧 붕괴하는 것 아닌가, 친중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으나 하나의 설에 불과하다”면서 “1998년 이후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빼고는 아주 단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핵실험서 방사능 물질 ‘제논’ 첫 검출”

과기부, 핵실험 사실 정부차원 공식 확인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 물질인 ‘제논’이 처음으로 남한 지역에서 검출됐다. 과학기술부는 25일 “북한이 지난 9일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이 자체 수집한 진진파의 분석, 국내에서 포집한 대기 중에 핵실험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제논) 확인, 미국이 우리 층에 공식 통보한 방사성 물질 탐지결과 등에 따라 확인된 것이라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과기부는 핵실험 장소가 함북 길주군 풍계리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춤’ 파문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합승을 거부해 군 부대 시찰을 못한 원혜영 의원이 25일 오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입장장을 밝히던 중 ‘호전적’이란 표현을 쓰자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혜영 의원 군부대 시찰 저지 싸고 여·야 공방

국방위 국감 ‘개성춤판’ 2라운드

여야는 25일 한나라당 국방위원회들이 ‘개성공단 춤’ 파문으로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의 전날 군부대 시찰을 ‘저지’한 것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개성 춤 공방이 한풀 꺾이자 미자 원 의원 국감참여 문제를 놓고 2라운드가 펼쳐진 셈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지도부의 격앙된 반응과 달리 원 의원과 같은 국방 위에 소속된 우리당 의원들은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를 내거나 언급을 자제해 ‘온도차’를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 직후 당 소속 국방위원들을 긴급 소집 이번 사태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다. 한나라당 국방위원회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오전 최고증진연설회의에서 “한나라당 국방위원회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친 것은 당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 이를 개성공단에서 술 먹고 춤춘 원 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 직후 당 소속 국방위원들을 긴급 소집 이번 사태를 그대로 묵과할 경우 유사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방위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다. 한나라당 국방위원회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오전 최고증진연설회의에서 “한나라당 국방위원회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친 것은 당 지침을 어긴 것이다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 이를 개성공단에서 술 먹고 춤춘 원 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수희 10월 26, 27일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봉네마트 앞)

선행안내